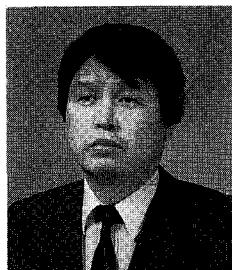


육계부문의 산업평화를 위하여



김 정 주
건국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WTO의 출범과 함께 농산물의 수입 자유화는 한국 농업부문에도 깊숙이 침투되어 국제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에 대한 구조 조정과 기술투자를 실현하지 못한 채 이러한 변혁기를 맞은 우리나라 농업은 일대 위기에 처해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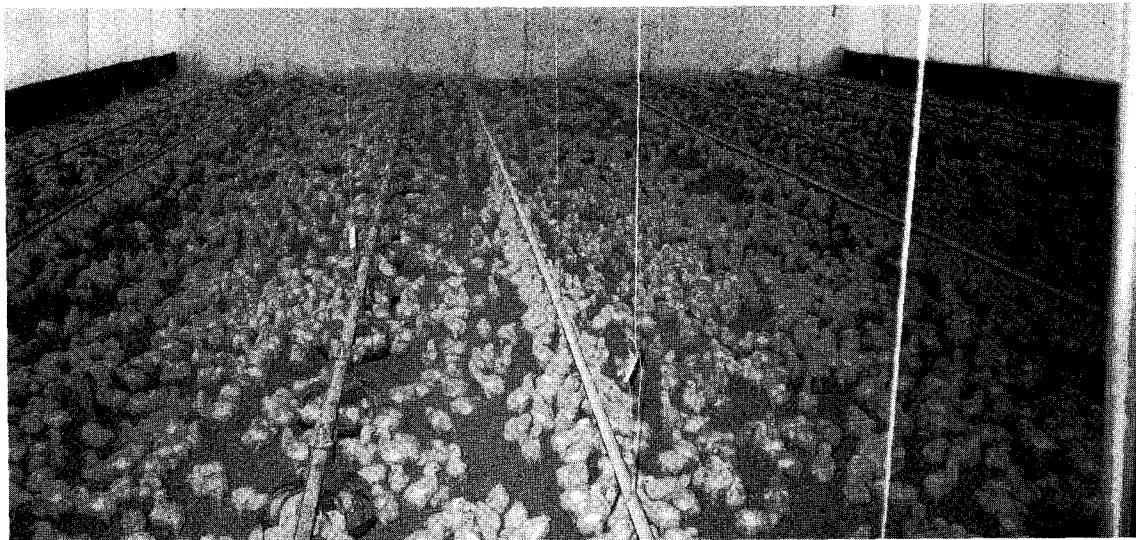
물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난 몇 해에 걸쳐 백방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그 접근방법이 대부분 원론적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제경쟁력 제고는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전제로 하는 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평적 통합경영에 의한 효율의 증대와 최종 소비 상품을 지향하는 수직적 통합 경

영 방식이 많은 농업 선진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즉, 통합경영 체계를 통하여 원가절감, 품질 및 위생 처리 수준을 향상시킴은 물론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합경영 체계를 한국 농업에 적용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한국 농업부문 중에서 통합경영 체계로의 발전이 가장 앞서고 있는 것은 육계 산업 부문이다.

한국의 육계산업은 개별 경영 체계에서 부분 통합경영 체계로, 부분 통합경영 체계에서 다시 완전 통합경영 체계를 향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 현재 통합경영 체계에 의한 시장 점유율은 약 50%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개별경영 체계에 비하여 닭고기 상품을 기준의 약 30%의 비용절감이 가능하여 이 통합경영이 정착되면 우리나라 육계산업도 국제



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영구조의 개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계열주체와 농가간의 갈등이다.

계약사육에 의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반 회사의 성과급 제도에 해당하는 폐널티-보너스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사육농가의 생산성에 따라 성적이 좋은 농가에게는 보너스를 주고, 성적이 나쁜 농가에게는 폐널티를 물리는 것으로 육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인책으로서 좋은 방법임에 틀림없다.

만일 이러한 성과급 제도가 없으면 경영결과에 대한 책임 의식이 희박하여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질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가 있는 일이다.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국가가 망하는 이유도 각종 사업에 경제적 인센티브-폐널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저하된 생산성이 누적된 결과로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농가의 생산성을 평가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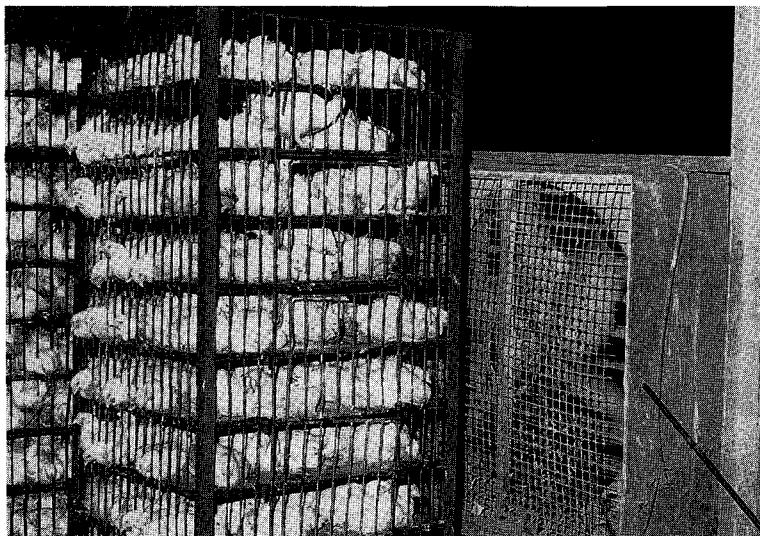
기준이 되는 사료 요구율이나, 생존율 등이 계열 주체와 사육농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는 양자간 분쟁의 여지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사육 농가가 수취하는 사육보수가 사육농가의 입장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외생적 변수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육농가의 경영성과를 판단하는 지표를 설정함에 있어 병아리의 품종, 계절, 사료 등에 따라 사료 요구율이나 폐사율을 세분화 시킨 평가지표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사육농가의 평균성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에 미달한 농가는 폐널티를 물게 하고 그 기준을 넘어서는 농가는 보너스를 받게 한다면 계열주체의 입장에서는 폐널티를 받아 보너스를 주게되어 결국 계열주체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사육농가들끼리만 경쟁을 시키는 결과가 된다.

왜냐하면 평균(사육농가의 평균 성적)에 대한 편차(보너스와 폐널티)의 합은 0(기업의 추



가적인 비용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폐사율이나 사료요구율을 놓고 계열주체와 사육농가간에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지금까지의 협력관계는 사라지고 계열주체와 사육농가간의 피 터지는 싸움이 벌어진다.

그런데 그 싸움의 결과가 뻔하다.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을 농가가 대응할 재간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필자는 이미 가칭 “육계계열화 사업 분쟁 조정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을 수 년 전부터 한 바 있다. 이 아이디어는 언론 중재 위원회와 같은 맥락이다.

만일 신문방송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있다면 개인이 신문 방송사를 상대로 싸움을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 될 것이다.

이러한 난처한 경우를 대비하여 만든 것이 언론 중재 위원회라는 것이다.

한가지 예를 더 들자면 길거리에서 자동차 접촉사고가 나면 운전자 당사간에는 좀처럼 해

결이 나지 않는다. 경찰이 와야 해결이 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다 보니 복잡한 길에 차를 세워두고 마냥 경찰(중재자)이 오기를 기다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육계산업 중재 위원회도 계열주체와 농가간의 분쟁이 생기면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 위원회가 나서서 분쟁의 옳고 그름을 어느 정도는 판가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육계산업의 중재위원회 설립에 관해서는 아직 이렇다할 진전이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한 업계 내지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쟁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최소화할 방안은 없는 것인가? 사료요구율이나 폐사율은 일차적으로는 병아리와 사료의 질에 달려 있지만 다음으로는 사육시설에 달려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환기나 온도는 병아리의 생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는 아직도 비닐하우스에 보온덮개를 이용한 계사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임시적인 사육 시설에서 온도나 환기가 제대로 제어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결국 관리자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병아리를 돌보았느냐에 따라서 육계의 생산성이 좌우된다는 말이 된다. 그러니 육계 생산성 하락원인을 병아리, 사료의 질에만 떠넘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결국 사육시설의 현대화가 분쟁해소의 제일 조건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각종 제어 기능의 자동화 전산화

이다.

예컨대 계사내의 온도가 일정한 간격으로 기록되는 장치를 해 두면 이것이 나중에 폐사율이나 사료 요구율을 따질 때 과학적인 근거자료가 되는 것이다.

필자가 지난 1월 미국 아칸소 주 육계 농가에서 관찰한 바에 의하면 자료의 전자기록장치(Electronic Data Recording System)를 계사 중앙에 설치하고 매 15분 간격으로 온도가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고안되어있다. 이를 휴대용 컴퓨터에 연결, 해당자료를 그림으로 그려보게 하는 장치이다.

평상시 문제가 없을 경우는 그저 단순한 기록에 불과하지만 일단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찾는데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 계열농가를 지도하는 직원은 수시로 농가를 방문, 이 온도자동측정기를 점검함으로써 농가의 사육관리

철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이제 분쟁이 생길 때마다 서로 잘못을 떠넘기는 식의 해결방법은 불신만 조장되고 결국은 계약사육에 대한 발전은 고사하고 기피현상만 가중될 것이므로 지금부터서라도 육계계사 및 시설의 현대화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로부터 장기 저리 응자의 정책자금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며 계열주체로부터서도 이러한 계사 및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금융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뭐니 뭐니해도 육계산업의 평화를 위해서는 계열주체와 사육농가간의 신뢰 구축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신뢰의 구축은 그 사회의 발전 수준과도 크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인내를 가지고 산업발전을 위하여 모두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양개]

개량 토종닭 분양

※ 분양 품종

- ★ 한협 3호 분양
- ★ 청둥오리 분양

※ 병아리 분양 및 상담

- 매주 [화요일] ~ [금요일] 분양합니다.



동남농원

주 소 : 경기도 안성군 원죽면 송천리 478번지

전 화 : (0334)672-0088, 674-0606, Fax:(0334)674-0050

핸드폰 : 011-307-7208, 호출기 : 012-1363-7208

농 협 : 237020-52-019626, 예금주 : 윤 용 구

우체국 : 101634-0021930, 예금주 : 윤 용 구